

전주시 인권도시 실현에 가속도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전주시가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인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국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공무원 인권의식 실태조사연구를 자체용역으로 실시하는 등 인권행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오는 5월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미옥 교수)과 공동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할 전주시의 인권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권정책의 추진과제 등을 설정해 의미 있는 사업은 신규 도입하고 과급효과가 큰 인권정책은 확대하는 등 분야별 중점 및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전주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1월부터 2달간 전주시 인권행정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전주시 공무원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위한 자체 연구도 실시했다.

이번 연구는 인권행정의 집행주체인 전주시 공무원의 인권의식과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인권의식 △현 직장의 인권현황 △인권교육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에 따른 인권의식 △차별경험 차이 비교 등에 대한 설문은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 공무원 262명이 참여한 이번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전주시 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은 4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69점으로 중간 이상의 인권의식 수준을 보였다.

특히 전주시에서 인권존중 정도가 존중된다는 응답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아 전주시 인권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 지자체와 비교한 상대적 인권보장 수준은 중간수준 이상인 85.5%,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에는 92.7%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대상별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순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인권존중 수준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전주페이퍼 화재 발생

3일 오후 3시께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은 공장 내 냉각탑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났다. 인권정책 대상으로는 일반시민(37.4%), 아동·청소년(19%), 장애인(11.1%)순으로 나타났으며, 역점추진 인권영역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39.7%) △패각적이고 안전한 삶의 보장(27.5%)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19.5%)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전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이유로는 경제적 지위(직업과 소

득, 63%)가 손꼽혔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으로 의사표현의 자유(33.2%)가 1순위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연구결과가 전주시 공무원의 인권의식 향상과 전주시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인권교육 등 공무원 및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원주민들이 타지역 내몰림 없게 제도 마련

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지역상생협력 조례 시행

전주시가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해 원주민과 영세업자가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제도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건물주와 임대인간 상생협력 체결을 유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 주민협의체인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가 지난달 30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시가 서울 성동구와 중구 다음이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은 전주에서 벌어지는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시는 이 조례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상권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대인간 임대기간과 임대료안정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체결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향후 해당 협약에 적극 참여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의 시설 내·외부 수선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 및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주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회적경제기업가와 문화예술인 등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주민협의체인 상생협의체도 구성·운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주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첫 마중길 상생협의회'와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와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이해 확산에 주력해왔다. 또, 11월에는 전주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 200여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상생협약체결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이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이번 조례는 임대료를 무작정 인상하지 말라는 규제보다는 적절한 임대료 인상으로 지역상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지역공동체가 깨지고 급기야는 지역특색마저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지역주민이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재기자

완산서, 종합치안활동 총력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강홍수)가 주요범죄 증가가 우려되는 연말을 맞아 민생인전 종합치안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산서는 지역경찰 2,820명, 본서 등 자원근무 563명, 상설중대 494명, 협력단체 893명 등 총 5,000여명에 달하는 가용 경력을 동원해 주택가 골목길 및 원룸촌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로 가시적인 체감치안활동을 펼쳤다.

또한, 관내 금융기관, 금은방, 편의점 등 519개소에 대한 방범진단을 통해 시설보강 등 자위방법을 촉구하는 한편 여성고객 이용이 많은 대형주차장 33개소 역시 시설점검을 진행했다.

강홍수 경찰서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평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완산경찰을 격려하고, 1.31일까지 받거리 여성안전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지속 전개 범죄분위기 사전 차단과 강?절도 등 민생치안 형 범죄예방에 집중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치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청소년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오는 2월 20일까지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지역아동센터 15곳 350명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3일 밝혔다.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건강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강·음주예방·영양·흡연예방에 대한 교육과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먼저, 보건소 건강증진팀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충치 및 잇몸병 유무 등의 구강위생 상태를 확인한 후 치아 홈 메우기와 불소

도포, 스के일링 등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상자 전원에게 칫솔과 치약 등 구강위생용품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칫솔질 교육을 통해 스스로 올바른 구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건강한 생활 지침 및 식품구성, 자전거를 이용한 영양교육, 가상 음주체험 등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흡연예방을 위한 △담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 △평생금연선서 △간접흡연바로알기 등의 교육도 함께 운영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지역아동센터 25개소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425명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김영재기자

진안 운장산 실종 여성 수색작업 중단

홀로 진안 운장산 등산에 나섰다 실종된 김모(41,여)씨에 대한 수색작업이 종료됐다.

3일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경찰과 소방, 군이 합동으로 펼친 수색작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씨 가족은 200여명의 인원이 투입된 수색작업을 마친 31일 오후 4시경 경찰에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

김씨 가족은 "구조대분들 모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땀이 워낙 산을 좋아하는 산에 묻힌 것 같다"며 수색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 창원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12월 22일 오후 3시 40분경 "산에 올라온 지 두 시간쯤 지났는데, 휴대폰 배터리도 없고 안개가 끼어 있고 길을

않았다"며 119에 조난신고를 했다.

운장산은 당일 오전부터 기온비가 내렸고 산 정상 부근은 눈으로 덮여있던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자마자 출동한 무진장소방서는 여성을 발견하지 못하자 진안경찰서, 진안군청, 진안대대, 특전사, 중앙구조본부, 의용소방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22일부터 10일여간 1,400여명의 인원과 헬기 등 수색장비, 구조견을 동원해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당국 관계자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수색을 중단한건 맞다"며 "수색을 잠정 중단하지만 김씨의 단서가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즉시 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보복운전 60대 남성에 벌금 30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3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차를 따라 차선을 바꿔가며 보복운전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61,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7시 32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포터더블캡 1톤 화물차로 피해자 A씨(35)가 운전하는 BMW 730i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면 따라가서 또 다

시 급제동을 하는 보복운전 행위를 500m 가량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정인재 판사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해 그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